

오늘 평준화 일반고 학교배정 공개 추첨

체육특기자·지체부자유자·희귀병 질환자·다자녀가정 자녀 등 선배정

2019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학교배정 공개 추첨이 오늘 오후 2시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공개 추첨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중등교장단 회장, 언론인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등 6명이 추첨위원으로 참여하며, 학생과 학

부모의 참여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합격한 전주, 군산, 익산 지역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며, 이날 추첨을 통한 배정인원은 전주 23교 6,270명, 군산 6교 1,571명, 익산 7교 1,745명 등 총 36교에서 9,586명이다.

학교배정은 먼저,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다자녀가정 자녀 등을 선배정하고, 공개추첨으로 뽑힌 배정기준에 의해 일반배정 대상자를 1지망 지원자부터 학교별로 선배정자를 제외한 정원수만큼 컴퓨터로 추첨 배정한다.

이 때 1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한 학

생은 1지망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의 2지망 배정 대상자로 분류되어 배정기준에 의해 다시 배정한다. 같은 방법으로 배정이 완료될 때까지 배정하게 된다.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21일부터 25일까지 해당 학교 및 학교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등록금 납부 등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정은성 기자



지난 11일 (주)CAL의 혼다로타 인사부장이 전주대를 방문했다.

매년 일본 기업서 모셔가기 경쟁

일본 IT기업 CAL, 전주대 방문... 최종면접 직접 진행

지난 11일 (주)CAL의 혼다로타(Honda Ryota) 인사부장이 전주대를 방문했다. 1차 및 2차 전형에서 합격한 일본언어문화학과 학생들의 최종면접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서다.

(주)CAL은 도쿄, 삿포로, 후쿠오카, 나고야 등의 대도시에 근무를 두고 있는 일본의 대표 IT기업으로 매년 우수 인재를 찾기 위해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를 찾고 있다. 2016년도부터 방문을 시작해 올해로 4번째다.

혼다로타 인사부장은 "전주대가 한국에서 가장 획기적인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전주대생들은 일본어 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하고, JAVA/C언어 등 IT업계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주대는 2016년부터 융합·연계 전공 과정인 슈퍼스타컬리지(Superstar College)에서 '일본IT융합 전공'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정은성 기자

일본언어문화학과와 스마트미디어학과가 전공을 융합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적합한 IT프로그래머를 육성한다. 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글로벌IT공학사 및 문학사'라는 2개의 복수학위를 부여한다.

박강훈 일본IT융합전공 주임교수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과 공학을 융합하는 것에 반대하고 의구심도 품었지만, 현재 우리 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학과가 됐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일본IT융합전공 개설 후 매년 일본 IT기업으로의 취직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었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 또한 높다.

한편,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는 일본IT융합전공 외에도 호텔관광 및 항공서비스 분야도 특성화시켜 운영 중이다. 매년 일본 호텔 업계에서도 전주대를 방문해 직접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간편해진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6세미만 100%지급

소득·재산조사無... 탈락 아동 재신청 불필요

지난해 11월 17일 출생아부터 11~12월분까지 소급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규 신청을 오늘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태어난 지 60일이 안 됐다면 지난해 11~12월분까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가구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내용이 사라진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아동수당법이 오늘 공포되므로 보면 지급 아동수당은 이때

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3월31일 사이 신청하면 개정 이후 첫 지급인 4월25일 한 번에 소급 지급된다. 이번 개정으로 올 4월 만 6세 미만 아동 20만여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11만여명은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아동이며 9만여명은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 아동이다.

특히 지난해 태어난 아동 중 11월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을 서두르면 11~12월분까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이 출생 이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17일 출생아는 60

일째인 15일 바로 신청하면 11~12월분과 내년 4개월분까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1월16일 이전 출생아에 대한 선 이전처럼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를 토대로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 당시 아동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바뀐 경우 복지부에서 발송할 예정인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가구에선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 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촬영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내면 된다.

이번에 새로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보다 절차가 간편해졌다. 별도 소득·재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배우자의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없이 보호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때도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지급처별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5만원 감액했던 소득 인정액 일정 기준 이상 가구도 보편 지급 원칙에 따라 올해부터 수당이 10만원 전액 지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관련 사항은 7~8월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적극적 수당 신청을 부탁했다. /뉴스

아동학대 2만2천건 넘지만 발견율은 '2.6%' 에 불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2022년 발견율 4% 목표

한 해 아동학대가 2만2000건을 넘어 서고 사망 아동은 5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지만 학대 발견율은 3%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등 피해 아동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 역량 결집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3만4169건 가운데 최종 학대 판정된 경우는 2만2367건에 달했다. 5년 전인 2012년 6403건이었던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

8700건 등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도 8명에서 38명으로 4.75배 증가했다. 적발 이후에도 아동학대가 반복된 재학대도 2017년 처음 2000건을 넘어선 2160건을 기록, 5년 사이 2.3배 늘었다.

그러나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정건수(아동학대 발견율)는 2.64명으로 미국 9.4명, 호주 8명, 프랑스 3.94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인구가동정책관 아동권리과 소속이었던 아동학대대응

팀을 아동학대대응과로 격상하고 인력도 5명에서 10명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은 수사 과정보다 관리·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협조), 여성가족부(부모 교육), 경찰청(수사 협조) 등 관계부처에서 1명씩 3명이 파견된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로 높이고 재학대 발생건수를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이뤄지는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가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에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 정책 수행을 위한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의 '디지털소통팀'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

친자연적 공간조성으로 학생 정서함양 기대

전북교육청, 학교숲 14곳 추진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2019년 학교숲 14곳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숲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친자연적인 교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을 강화해왔다.

2017년 5개교, 2018년 11개교 이어 올해 예산 7억9000만원을 들여 14개교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학교숲 조성 사업 대상학교는 미산초, 중앙중, 전주제일고, 이리동산초, 정읍서초, 남원여고, 봉성초, 용봉초, 마령중, 괴목초, 수남초, 장수중, 정음초, 상서초 등이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은 15일까지 2018년 학교숲 조성 학교인 1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숲 조성 및 활용·관리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해 2019년도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평가의 기본 방향은 ▲수요자중심 평가 ▲사업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평가 결과 적극 활용 등이며 학교숲 조성 대상지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숲을 통해 학생들의 심성을 치유하고 학생인권 신장과 학교 폭력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